

민간통일운동방안

-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

문영희*

서론

한반도에 사는 우리민족 누구에게 물어봐도 남한과 북한주민 모두 상대 양쪽을 우리나라 땅, 우리민족이 아니라고 단 한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말하고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을 믿는다. 그러나 분단 50년 동안에 현실은 남북한의 체제가 다른 것만큼 남북한 양쪽의 역사와 문화, 전통, 사고와 의식은 물론 언어까지 너무 이질적이어서 통일의 소원은 너무도 요원하고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한 국토나 체제의 재통합이 아니라 국토와 국권 뿐 아니라 한반도가 우리민족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 단일 생활권 안에서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역사, 전통을 영유하는 것이다 곧 제도도하나, 민족도 하나, 생활도 하나가 되어 한반도 내에서 민족구성원 모두 자유와 복지를 영유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국민 모두는 소원하던 통일이 최근 남북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성큼 다가선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간 정상들의 접촉만으로 혹은 정치적 협상만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은 이루어 질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50년 이란 분단 상황은 남북한 우리민족에게 너무나 큰 이질감과 불신을 키워주었기 때문이다. 정부간의 협상으로 정치 제도적이거나 지리적인 통일은 가능하겠지만 정부간의 접촉만으로는 민족통합과 하나된 동질의 민족공동체를 이루기 어렵고 통일 후에 감당해야 하는 후유증의 위험부담도 큰 것이다.

이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통일은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의 가능성은 희박하며 또 그래서 안 된다는 결론을 양쪽정부 모두가 가지고 있다. 완만한 동일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합의를 끌어내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과 병행하여 정치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 내는 일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통일은 첫째, 화해와 협력단계 둘째, 남북연합단계를 셋째, 1민족1국가 통일완성 단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단체의 남북한 접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우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국민의 정부가 남북한 민간교류의 문을 개방하기 시작하였고 경제, 사회, 문화의 남북한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남북의 접촉은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 질 수도 있다.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한의 민간교류에도 보다 신중함을 기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남북한 민간교류를 하기 위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단과 통일의 의미는 무엇이며, 민간통일 운동의 환경은 어떻게 변해 왔으며, 왜 통일운동이 필요하고 민간단체의 통일운동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민간단체의 통일운동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지를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1. 한반도에서의 분단과 통일의 의미

한마디로 한반도의 분단은 국제형 분단이며, 내쟁형 분단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하면 2차대전후 소련의 팽창정책과 미국의 대응정책이 만들어낸 1945년 지리적 분단을 1단계로 시작하여 1948년 북한과 남한의 각각 독립된 정부를 수립 하므로써 민족 스스로 통합에 실패, 정치적 체제적으로 2단계의 분단을 낳았고, 양쪽의 체제적인 대치와 대결로써 민족과 문화의 통합에 실패하는 3단계적 분단을 통하여 고착화되었다.

한반도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3단계를 거쳐 고착화된 분단의 형태를 국민적 합의와 노력으로 정치적, 지리적 통합은 물론 민족구성원 모두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일 것이다.

이미 50년이란 분단의 역사를 통해 너무나 이질적인 체제, 문화, 역사, 사고가 고착화되어 있는데 굳이 통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많이 던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민족이 반드시 통일되어야하는 당위가 있다 첫째, 통일신라 후 1300년 동안 단일 민족국가였던 우리가 약소국가

* 제주YWCA 사무총장

라는 이유로 세계열강들에 의한 우리민족이 부자연스럽게 여기는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반드시 단일민족국가로서 전통과 민족 정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 다시 말하면 6.25 동족상잔의 비극과 이산 가족의 고통, 아직도 남아 있는 전쟁에 대한 불안, 자유와 인권을 상실한 북한동포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남북한이 분단 하에 허비되는 과도한 분단비용을 생산과 복지자원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세계의 3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넷째, 통일이 주어지면 남한의 경제 성장력과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 천연자원을 감안할 21세기 국제사회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민족번영의 기쁨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통일은 단순한 영토나 체제의 재통합이나 분단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 곧 ① 국토가 통일되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며 한반도가 민족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는 것, ② 국권이 단일화되고 단일정치체제로 21세기의 국제사회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③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통합하여 민족경제통합을 이루어 이세기에 무한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언어, 문화, 전통, 사고, 등 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함과 동시에 동질성을 회복하여 단일 민족국가로서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것, ⑤ 남북한국민모두 마음의문을 열어 고통과 불안이 더 이상 없고 단일 생활공동체로서 같은 문화와 생각을 공유하며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토도 하나, 제도도 하나 민족도 하나, 생활도 하나가되어 민족 구성원 모두 자유와 복지를 영유함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진정한 의미의 통일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의 가치와 당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민족통일에 관심은 있었으나 체제유지를 위한 정책과 남북분단의 긴장상황을 정권연장에 악용하고 법·제도적인 강구를 소홀히 하는 등 지리적 통합은 물론 정치적 통합이나 민족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실질적인 노력은 아주 적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통일의 가치와 당위에 따라 궁극적인 통일은 지금까지 이념과 체제중심의 정부 차원의 통일정책에만 기대할 수도 없고 독일의 통일이나 베트남과 예멘의 통일과 같은 국제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볼 때 어떻게든 통일만 하면 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며 통일의 분위기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남북의 정부와 민간이 모든 노력과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2. 민간통일운동의 환경변화

이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통일환경여건이 갖추어져 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89년 몰타회담이후 동서 냉전체제에서 새로운 화해 협력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국제질서가 자율적이며 다원화되고 개방화되면서 자국의 이익과 공동관심사에 따라 상호의존적이며 전략적 동반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자국이익 중심의 무한경쟁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 소련, 일본, 중국도 공동적으로 탈냉전 한반도 정책을 철지한 자국이익 중심의 ① 한반도 안정과 현상유지 ② 한반도의 위기상황 발생 방지 ③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 최대한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곧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전환되어 통일여건에 유리한 환경이 국제적으로 형성되었고 독일의 통일이 우리국민들에게 자극적인 촉매 역할을 하였다.

국내의 남북한관계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남북한의 관계에서 북한은 대남 군사위협과 정치 선전공세, 혁명전략으로 일관하였고 남한은 남한대로 한미연합방위체제구축과 국가보안법으로 맞서왔고 남북한의 이념과 체제중심의 통일노력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이고 일방적인 희망사항만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90년대 이후 북한사회는 북한의 경제몰락과 심각한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들이 생존권위험을 받게되면서 핵 개발 위협에 따른 경수로 지원과 탈북자 증가와 그들의 인권보호, 국제사회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북한붕괴 억제 등을 위한 주변국의 연차적 정책 등에 의해 폐쇄적 이었던 북한사회가 어쩔 수 없이 개방과 국제화 양상을 띄게 되었다. 남한은 경제적 우위로 체제경쟁이 끝남으로서 적색공포의 대공 경제심이 점차 자신감으로 변하게 되었고 남한의 민간인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과 통일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국내의 민간 통일운동 환경의 변화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정부의 태도변화이다.

1970년 박정희 정권의 통일 관심사에 대한 출발을 기점으로 남북교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노태우 정권 때이다. 1988년 남북교류와 자유문제, 이산가족 서신왕래, 상호방문, 남북교역을 내용으로 하는 7.7선언을 시작으로 1990년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1991년 남북국이 UN에 동시 가입과 92년 2월 남북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협약 조인하는 등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어 94년 미북 제네바합의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와 함께 북한에 대한 200MW 경수로 공급과 년 500만톤 주유 공급 등의 내용에 합의한 미북 제네바 합의의 국제적인 분위기에 힘입은 김영삼 정부가 창구를 정부로 단일화하여 남북관계 개선, 대북 경제협력, 정상회담 등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이념과 체제중심 관계이며 서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희망만 제시하는 등 평화적인 통일 노력이 없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통일정책은 대화가 지속되지 못하여 결국은 상대를 비난하게

하고 경쟁과 대결을 불러 올 수밖에 없었고, 막연하게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 가능성도 작고 흡수통일은 더더욱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편 정부차원의 통일정책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민족문제를 강조한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은 반체제적이란 이유와 정부의 통일정책을 거스린 다는 이유 또는 정부의창구단일화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탄압의 대상이 되고 민간단체의 통일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① 평화를 해치는 일체 무력도발 불용, ② 흡수통일 배제, ③ 북한의 개방과 변화 돕도록 화해협력 새가지원칙의 대북정책을 표방하고 그 추진 방향으로는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남북 이산가족문제 우선 해결,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의 6개 추진방향을 내세웠다.

이어서 98년 2월에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마련 민간단체의 대북지원과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한 분배확인 목적의 방북을 허용하였고, ②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모금행사를 허용함과 동시에 언론과 기업체가 후원방식의 참여와, ③ 북한에 식료품공장 및 합영농장 설립허가, ④ 남북한 민간단체의 합동연구조사 사업과 문화교류 사업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98년 3월에는 정경분리원칙의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차원의 통일대비 역량의 강화,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개선에 여건을 만들었다.

따라서 90년대 대학연구소를 비롯하여 종교, 문화, 예술, 사회단체 등 정부에 등록된 북한교류 협력 및 지원단체는 총 250개, 98년과 99에는 매년 종교, 문화, 사회단체 회원들이 1000명이상 방북교류를 하여 민간단체간의 남북한 교류 협력여건의 문이 개방되었다.

3. 민간통일운동의 필요성

통일은 분단된 한반도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다. 반세기 동안 타율적으로 훼손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의 생명력을 복원하는 긴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통일은 과거의 원형(통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재통일이 아니라 21세기에 걸 맞는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통일이 라야 한다.

통일이 민족적대의 당면과제이며 미래지향적인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면 민족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족구성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됨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남북통일이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사회문화적 통합이 배제된 가운데 두 정권간의 단순한 권력분점 내지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이루어 질 경우 그와 같은 통일이 진정한 민족통합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대화관계에서는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노력 없이 양 정부간에 이념과 체제유지 중심의 이해관계를 가졌고 전혀 남북한 상대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희망사항만 제시하였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통일을 추구하였다가 대화가 단절되면 결국 상대를 비난하고 경쟁과 대치, 대결 상태를 불러 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남한정부는 북한의 경제사정악화와 식량난에의 고통을 보면서 평화통일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며 흡수통일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가능성도 희박하지만 흡수통일은 오히려 남한정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도 않다.

반세기 이상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체제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와 경제형태와 사고와 생활을 영위해 온 두 민족공동체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내기란 결코 쉽지도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꾸준한 남북간의 사회, 문화교류나 공동체의식 배양 없이 하루아침에 정부간의 협의에 의해서 체제가 통일이 된다고 가정 할 때 그 후유증은 남북한 모두를 붕괴시킬 만큼 대단한 힘을 갖는다.

독일과 예멘의 통일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1990년 독일의 경우 민족구성원들 간에 오랜 통합의 과정이 있었던 동서독간의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었지만 완전한 민족공동체를 이루기까지 현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정적 불안을 갖고 있고 또한 치유를 노력하여 보다 빠른 속도로 민족통합을 이루어 가는 반면, 정권적 차원의 통일협상만 있었을 뿐 사실상 통합의 과정이 배제되었던 예멘의 경우 국가의 결합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전이라는 동족상잔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을 볼 때 우리의 통일은 후유증이 덜하고, 서로 신뢰하며 민족구성원이 자유와 복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민족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평화통일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 분단이 고착화되었듯이 분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제거에 힘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은 전쟁이나 흡수통일이 전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먼저 화해와 협력단계를 거쳐서 남북한의 연합단계를 준비하고 궁극적으로 1민족1국가 통일 완성단계를 이루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남북한의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다. 민간교류를 통하여 마음을 열어 분단의 상처들을 치유함으로써 남북한의 불신을 제거하고 접촉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배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대강을 수립하고, 다양한 부문의 교류협력을 교통정리 하는 것과 현존의 두개의 정치체도와 법질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 할수 있겠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한 주민간에 깊게 드리워진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분단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도 주민의 마음을 하나되게 통일을 하 수도 없다. 남북한의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여 민족 통합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단연 시민사회, 종교, 사회단체 등 민간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과정에서 민간부분의 역할은 다소 경시되어왔으나 통일문제가 이제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범국민적인 지지 기반을 가진 시민단체들은 통일논의에 있어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정부보다 더욱 자유로운 입장에서 대북 및 통일정책의 대안을 개발, 제시할 수 있다 정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일괄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다 쉽게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때 민간부분은 정부의 정책의 수립은 물론 그 변경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단체들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실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통일과정에서 민간부분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정부도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4.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통일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의문제로 등장하고 통일운동과정에서 민간차원의 역할이 강조되는 지금, 북한의 식량난과 안타까운 현실에 남한의 민간단체들은 북한주민들을 지원하는 일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구현은 물론 남북 및 민족공동체 형성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 일 것이다. 그것은 민족의 이름으로 부과되는 도덕적 명령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며, 더욱이 통일 후를 내다볼 때 통일의 후유증을 줄이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90년대 들어와서 각 시민단체들은 건전한 시민사회형성을 위한 본연의 활동을 하면서 이외에 민족문제인 통일문제에도 깊은 관심과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90년 한국YWCA가 조직 내에 평화통일 협력위원회를 두고 통일을 준비하면서 분단 전에 북한에 있었던 5개 지방YWCA를 통일 후 바로 재건 할 수 있도록 통일되는 날까지 전국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부터 시작하여 북한에 분유 보내기 운동과 94년 경실련이 통일협회를 만들어 통일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범 민족적 합의를 끌어내는 일과 통일 대비하는 제도 의식개혁운동,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감시운동을 벌이는 일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시민단체들이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통일과정에서 통일대비역량확충을 강화하는데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긴급구호사업과 남북 농업협력사업, 바람직한 대북정책 제시, 민족화해를 위한 교류를 목적으로 96년에 창립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와 같은해 창립된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인권보호와 정치범 실태조사, 국내외의 홍보와 국제기구 고발, 탈북자지원 등을 목적으로 창립한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 연합'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통일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정부의 도움 없이 재정적인 자립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펴나가기 시작하였다.

94년 경실련의 통일협회 조사에 의하면 90년대 90년대 통일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는 대학연구소를 비롯하여 종교, 문화, 예술, 시민사회단체는 총 250개로 파악이 되었다. 1998년 현재 통일관련사업을 위해 통일부에 허가를 받은 법인은 총 57개 단체로 ① 대중 통일운동단체, 조사연구 단체, 종교계를 포함한 일반적으로 통일운동 전반을 다루는 단체가 27개로 대표적인 단체들은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평화문제 연구소, 민족화해협력 국민협의회, 통일불교협의회 등이 있다. ② 학술연구단체로는 16개로 북한연구소, 아시아과학연구소, 통일경제연구 협의회, 한국 사회문화 연구원 등이 있다. ③ 남북교류, 협력단체로는 7개로 남북문화교류협회, 남북민간교류협회, 경실련 통일협의회,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 등이 있다. ④ 인도적 지원단체는 7개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남북농업발전협력 민간연대 등이 있다.

이들 통일관련 사회단체들은 통일과정에서 국민적 통일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통일정책을 감시하고 통일정책에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기도 하며, 통일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통일을 위한 시민정신 배양과, 직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민족애를 고양시키며, 문화교류 등을 통하여 동질성을 회복하는 등 남북한 접촉을 통한 민족공동체의 바탕을 준비하고 있다.

5. 민간단체의 통일운동의 추진방안

남북한의 민족 평화통일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극명한 명제이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구상과 계획을 세워 인내심을 갖고 여러 단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이루어지리라 본다.

타올에 의하여 분단되고 민족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여 고착화된 50년간의 분단상황을 놓고 볼 때 정부는 실현 가능하고 평화적인 대북 및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부문의 교류협력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는 일과 정치체도와 법질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단일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다시 말해서 21세기 대비

하는 민족의 새로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의 시안별로 협조와 비판을 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연구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영시키는 등 국민적 합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접적으로 통일문제에 관여함과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대해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화 된 사회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 사회정의가 구현되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기존의 시민사회운동도 병행하여 벌여야 한다.

셋째, 통일을 위한 시민정신을 배양해야 한다. 즉 통일국가 미래상을 구현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와 통일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내도록 해야한다. 경실련의 '민족화해 아카데미'나 중앙대학의 '민족 포럼', 연세대학의 '대안적 통일교육 모색'의 그 좋은 예이다.

넷째, 민족사회의 통합을 위해 청소년과 신세대에게 통일의지를 심어줘야 한다. 오늘날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청소년과 신세대들은 이기적인 면이 강하다. 아울러 통일문제에 대해 냉소적이고 무관심하며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는 편이다. 다음세대의 주역인 이들의 통일의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통일이 되어도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 교류도 하나의 방법 일 것이다.

다섯째, 북한주민의 식량난과 경제난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시민단체들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대북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정서적 기반을 구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더 나아가 지금까지 해온 시민단체들의 일방적인 대북지원으로 북한주민들을 일방적인 수혜자를 만들지 말고 상호 교류하는 형태의 활동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책보내기 운동을 발전시켜 남북도서 교류전을 열거나, 남북한의 수확한 농산물을 교류전을 연다든지, 시민단체들간의 자매결연을 여는것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다.

일곱째, 북한은 세계적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이를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부각 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인권의 향상과 민주화가 없이는 통일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민족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회복과 인간다운 삶의 구현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적 여론과 관심을 환기시키고 북한내의 인권탄압과 탈북자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국제적 민간단체와 인권단체와의 연대를 모색 해 나가야 할것이다.

여덟째 통일후 남북한 주민의 지역, 이익, 계층별 다양한 요구와 이익집단이 표출 될 것이다. 남한 주민들과 사회, 문화, 등 내적 심리적 통합과정을 통하여 이익의 조화와 분쟁과 갈등의 조정을 국민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민족화합과 고 통분담의 자세 곧 통일국가의 건전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을 대비한 교육과 홍보 등 통일을 위한 국민 의식 개혁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통일 후 혼란과 부작용, 후유증을 최대한으로 극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민간단체의 통일운동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

첫째,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평화통일을 위해 민간단체의 통일운동을 위축시키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간단체의 통일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되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거나 평화통일에 방해가 되는 무질서한 민간단체의 통일운동은 억제하고 경쟁적 대북 교류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통일과 남북교류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북한관련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정부의 북한관련 정보의 폐쇄성과 대 국민 홍보부족으로 통일관이 정립이 안 되게 하고 오히려 대북인식의 혼란을 가져왔다. 따라서 정부는 통일교육 및 대 국민 홍보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민족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 국민 통일교육은 관 주도형으로 이끌어 나가면 성과가 없고 민간 시민단체에 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북지원이나 남북교류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도입하거나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민간단체들이 적극 활용하여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단체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

첫째, 반드시 민간단체의 남북교류사업 시 남북 주민들 간에 통일문화 창달과 민주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민간단체들은 남북한의 이질성과 적대적 해소가 목표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민간단체들의 자기 과시적 행사나 전시적 행사는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사는 남북한 주민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아울러 체제경쟁이나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셋째, 상호이익의 바탕이 없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시혜교류는 자제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민간단체들이 가지기 쉬운 감성적 차원에서 벗어나 현실과 이상을 결합하는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가능한 남북한 주민의 생활권 통합이나 통일문화형성에 관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다섯째, 성공적인 남북한 민간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내적 기반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화해를 위한 국민적 의식을 전환시켜 통일운동에 동참을 유도하고 통일을 위한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계속적인 연구와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도록 한다.

여섯째, 통일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교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 단체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유사 단체들간의 경쟁을 탈피하고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관련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단체의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북측에 뒷돈을 제공하거나 지나친 물품공세로 북한을 지원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려운 북한사회의 경제정이나 민주화에 전혀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 교류발전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여덟째, 북한지원을 위해 사회단체들이 자 단체의 성과위주의 무리한 현금도 금이나, 현품수집은 오히려 남북주민들에게 북한지원에 대한 염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포애의 발로로 동참하게 하여야 한다.

아홉째, 국민들을 통하여 모금된 돈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국민들에게 보고하여 보람을 갖게 하여 다시 북한지원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결 론

이상과 같이 한반도에서 분단과 통일의 의미, 그 동안 민간통일운동의 환경변화와 함께 민간단체의 통일운동의 필요성과 그 역할 그리고 추진해야 할 방향과 민간단체가 통일운동을 전개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점등을 살펴보았다.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통합의 달성은 일방적인 수렴과정이 아니다. 남북한의 민간들이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족간의 지원과 나눔을 통하여 서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하지 못 하는 많은 부분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을 위한 남북한의 변화는 체제의 생존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만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 실현하는 일은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남한 사회단체의 성과적 이기심이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은 50년간의 분단으로 생겨난 사회문화적 이질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냉전논리적 가치판단과 경제적 우월성에 입각한 단기적 청산의식은 북한이라는 사회적 단위에 또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 결국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합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지혜로운 접촉을 함으로서 신뢰감 회복과 이질화 해소 노력을 하는 준비된 통합이어야 할 것이다.